

보도시점: 2023. 12. 28.(목) 10:00 배포: 2023. 12. 28.(목) 08:30

민원인·공직자가 직접 경험한 부패 관행 근절에 총력 기울여야

-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은 종합청렴도 향상까지 이어져
- 국민권익위, '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498개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오늘 발표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 7천 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6만 7천 명 등 약 22만 4천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각급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2023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80.5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떨어졌다. 청렴노력도는 82.2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청렴체감도 점수가 떨어져 종합청렴도 점수 하락으로 이어졌다.

□ 기관별로는 123개 기관이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했고 134개 기관이 하락했다. 1등급 기관은 16개로 2022년도 28개에 비해 줄었다.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3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경기 포천시였으며, 2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기상청·인사혁신처 등 41개 기관이었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2022년 5등급이었던 부산시교육청과 경상북도개발공사가 4개 등급 수직 상승하여 청렴체감도 1등급으로

거듭났다. 또한, 반부패 시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청렴노력도 등급이 3개 등급 상승한 기관은 5개로 조달청, 전북 김제시, 서울 송파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이다.

특히,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우수기관은 단 6개로 질병관리청, 경기 여주시, 경북 경주시,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 서울 구로구이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만이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였다.

청렴체감도 평가

- 공공기관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15만 7천 명의 민원인이 직접 평가한 외부체감도는 전년보다 다소 낮아진 반면, 6만 7천 명의 공직자가 평가한 내부체감도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부체감도에 비해 내부체감도가 현저히 낮은 경향*이 보여 조직 내부 운영 과정에서의 부패 관행을 근절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였다.

* 외부체감도(87.0점, 전년 대비 -3.3점), 내부체감도(63.3점, 전년 대비 +0.7점)

부패인식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외부 민원인들은 ‘공공기관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함(86.8점)’에 가장 낮은 평가를 줬으며 내부 공직자들은 ‘연고관계나 사적 이해 관계에 의한 특혜 제공(55.4점)’에 매우 낮은 점수를 줬다.

- 공공기관과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0.42%이었으며, 내부 업무과정에서 공직자가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1.99%로 민원인의 경험률에 비해 4배 이상 컸다.

부패 경험이 있는 민원인의 비율이 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업무 분야는 11개로 재·세정, 보조금 지원 등 모두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측정 업무 전체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년에 비해 부패경험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광역과 기초

모두 ‘보조금 지원’ 업무로 나타나 공공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노력도 평가

- 498개 기관의 청렴노력도 점수는 전년과 같은 82.2점으로, 각급 기관은 고유업무 및 구성원 특성 등을 고려한 부패취약분야 개선 과제 등 맞춤형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해 기관장 주도로 충실히 이행했다.

특히, 공공기관 비공무원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306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중 87.9%가 채용 단계별 준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한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을 각급 기관 자체 채용규정 등에 반영했다.

192개 공직유관단체 중 98.4%는 채용과정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자체 감사규정 등에 규정화하는 등 국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했다.

한편, 전년도 종합청렴도 4·5등급 기관 중 국민권익위의 청렴컨설팅을 지원받은 24개 기관 중 13개 기관의 경우 종합청렴도 등급 상승의 효과가 있었다. 특히 경기 포천시는 청렴컨설팅 지원을 통해 종합청렴도가 3개 등급 상승해 우수기관으로 거듭났다.

이러한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은 실제 종합청렴도 향상으로 이어졌다. 통계 분석 결과, 전년도 청렴노력도 상위기관은 올해 종합청렴도 점수까지 우수한 경향으로 나타나 각급 공공기관이 기울인 노력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패공직자 발생 현황 평가

- 국민권익위·감독기관·검찰·경찰 등 기관 외부에서 적발돼 징계·기소·유죄판결로 부패행위가 확인된 사건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대 10점까지 감점된다.

올해는 160개 기관에서 531건이 감점됐다. 유형별로는 공금 유용·횡령 36.3%, 금품수수 17.5%, 부정청탁 8.1%로, 금전·청탁과 관련된 부패사건이 여전히 큰 비율을 차지했다.

주요 감점 사례로는, ▲고위직 직위를 악용해 소속 직원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인사·계약상 특혜 제공(ㄱ공직유관단체) ▲고위직 승진 인사를 빌미로 한 금품 등 수수 사건과 입찰·계약 비리 사건까지 발생(ㄴ중앙행정기관) ▲부정 취득한 자격증으로 자격수당을 수령해 소속 직원 139명 무더기 징계(ㄷ공직유관단체) 등이었다.

-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국민권익위와 해당 기관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 민원인과 공직자가 지적한 부패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우선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평가에서 드러난 부패취약기관에 대해 정부 합동으로 집중점검하고 1년간 부패방지교육, 청렴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위원장 직무대리는 “그동안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시행으로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은 많이 향상됐으나, 국민은 여전히 공공기관 내·외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를 직접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패취약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부패 대책을 실행해 공공부문에 잔존한 부패 관행을 철저히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부패방지국 청렴조사평가과	책임자	과 장	정가영 (044-200-7631)
		담당자	사무관	정영수 (044-200-7632)

□ **평가 대상 : 총 12개 유형, 498개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광역	기초				I (공기업)	II (준정부)	III (중점)	IV (지방 공사·공단)	V (연구원)
I (장관급)	II (차관급)		I (시)	II (군)	III (구)						
25	21	17	75	82	69	17	32	55	45	39	21

□ **평가 체계** : 청렴체감도(설문, 60점) + 청렴노력도(실적, 40점) - 부패실태(발생 현황, 10점 감점)

① (청렴체감도)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157,627명)과 내부 공직자(67,096명)를 대상으로 측정

○ (측정 항목) 부패인식 7개 항목, 부패경험 2개 항목

외부체감도	부패인식 (7)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행위, 사익추구, 업무투명, 절차위반, 소극행정
	부패경험 (2)	금품등 제공 경험률, 경험 빈도
내부체감도	부패인식 (7)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행위, 사익추구, 부당지시, 인사위반, 예산 부당집행
	부패경험 (2)	금품등 제공 경험률, 경험 빈도

○ (기간·방법) '23. 8 ~ 11월, 전화·이메일·모바일 조사

② (청렴노력도) 기관별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 평가 지표 : 반부패 시책 추진계획 수립,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기관장 관심과 노력, 부패 유발요인 정비, 시책효과성 등 12개 지표

③ (부패실태)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 기소, 유죄판결 등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국민권익위·감독기관·검찰·경찰 등 외부적발된 사안만 반영)

※ 정량평가(5점) : 부패행위자 직위, 부패금액, 기관규모, 사건 발생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산식에 따라 점수화

※ 정성평가(5점) : 조직적·관행적 사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 심의회를 통한 정성평가

□ **청렴도 우수 기관·전년대비 상승 기관**

(유형내 기관명은 가나다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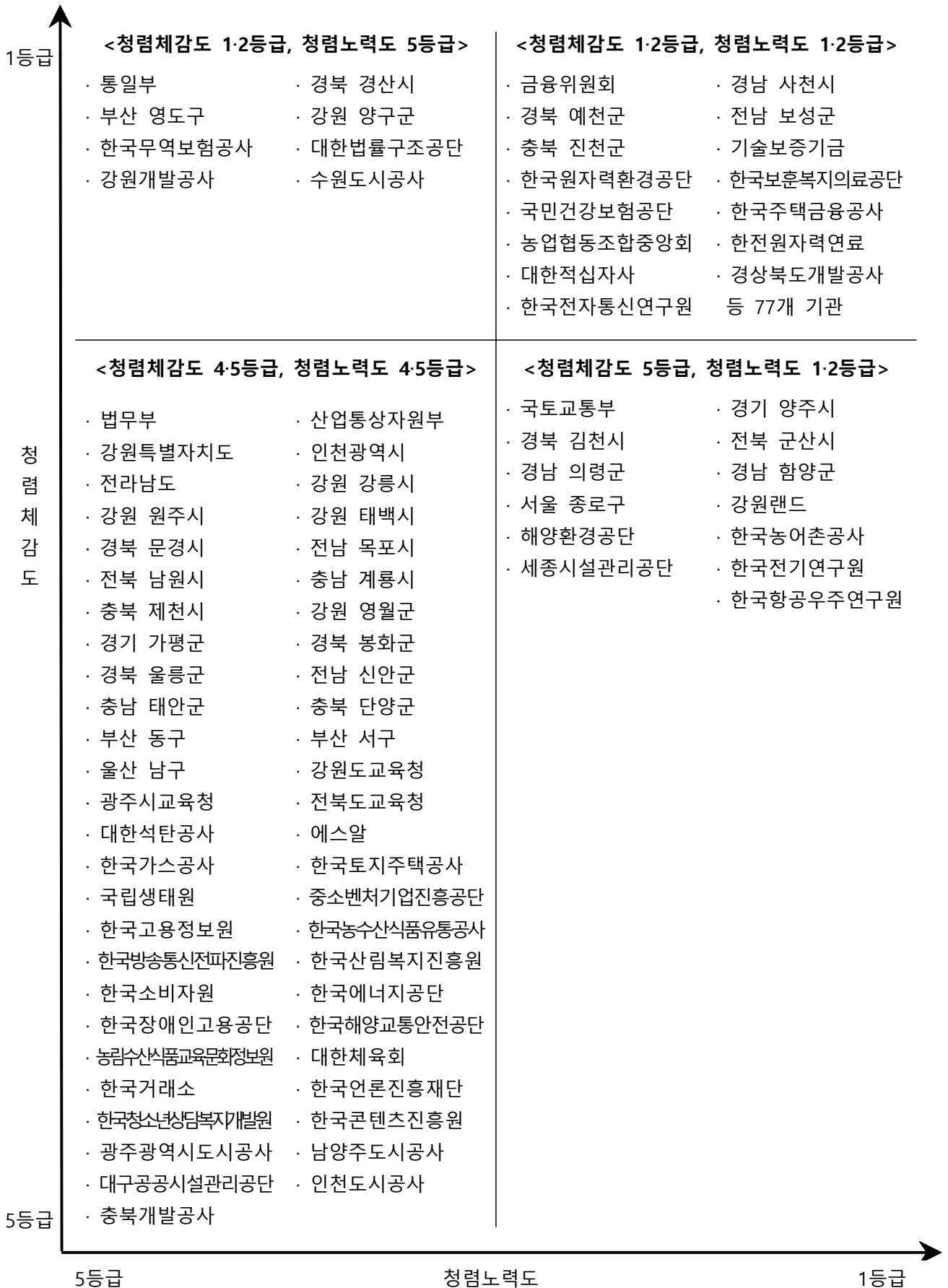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2년 연속 1등급	질병관리청, 경기 여주시, 경북 경주시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 서울 구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4개 등급 상승	-	부산시교육청, 경상북도개발공사	-
3개 등급 상승	경기 포천시	인사혁신처, 전북 정읍시, 전남 진도군	조달청, 전북 김제시, 서울 송파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2개 등급 상승	기상청, 인사혁신처,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 동해시, 경기 용인시, 경남 거제시, 경남 사천시, 경북 상주시, 전남 나주시, 전남 순천시, 전북 김제시, 전북 전주시, 전북 정읍시, 강원 인제군, 강원 횡성군, 경기 양평군, 경북 울진군, 경북 칠곡군, 대구 군위군, 전남 진도군, 전남 함평군, 충북 진천군, 광주 서구, 부산 동래구, 서울 강남구, 서울 노원구, 서울 송파구, 울산 동구, 부산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 한국마사회, 한국서부발전, 한국조폐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북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기상청, 소방청,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광명시, 강원 동해시, 전남 여수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상주시, 충북 옥천군, 전북 무주군, 경북 청송군, 서울 동작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남구, 충북도교육청, 한국마사회, 한국서부발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전원자력연료, 한국환경보전원,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 광주시, 경기 포천시, 경남 사천시, 전남 나주시, 전북 군산시, 경북 울진군, 경북 칠곡군, 대구 군위군, 대구 달성군, 전남 함평군, 전북 장수군, 서울 중구, 울산 북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 국가철도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인구보건복지협회, 코레일유통,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성남도시개발공사

□ 청렴도 미흡 기관·전년대비 하락 기관

(유형내 기관명은 가나다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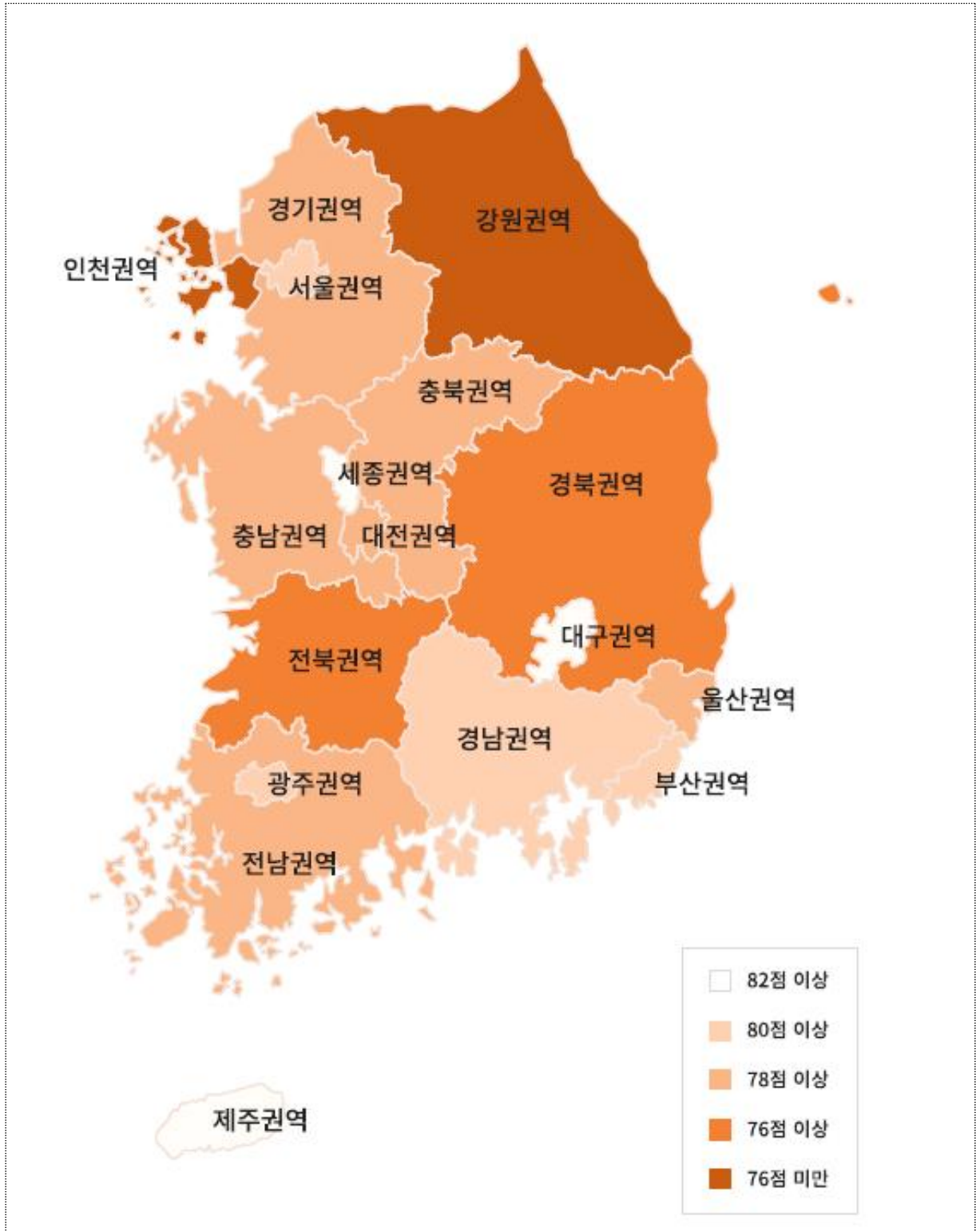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2년 연속 5등급	강원 삼척시, 경북 문경시, 강원 화천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기 양주시, 경북 문경시, 전북 군산시, 강원 영월군, 경남 의령군, 경북 울릉군, 전남 장흥군, 서울 도봉구, 서울 마포구, 강원랜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대한체육회,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 삼척시, 경북 문경시, 강원 양구군, 강원 화천군, 부산 강서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3개 등급 하락	충남 공주시	강원 태백시, 세종시교육청,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전KPS,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
2개 등급 하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병무청,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강원 태백시, 경기 구리시, 전남 목포시, 충남 천안시, 강원 평창군,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전남 곡성군, 전남 신안군, 전북 순창군, 충남 태안군, 광주 남구, 부산 영도구, 서울 용산구, 인천 연수구, 한전KPS,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체육산업개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새만금개발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기 의왕시, 경기 이천시, 충북 청주시, 강원 정선군, 경남 함양군, 전남 신안군, 충북 단양군, 충북 증평군, 광주 남구, 부산 서구, 서울 양천구, 인천 중구, 강원도교육청, 대한석탄공사, 해양환경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병무청, 강원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 수원시, 경북 경산시, 전남 목포시, 충남 공주시, 충남 천안시, 강원 영월군, 경기 가평군, 전북 무주군, 충남 태안군, 대구 수성구, 부산 영도구, 인천 연수구, 대전시교육청, 한국지역난방공사, 공무원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에너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안산시공사, 인천도시공사

□ 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 등급별 기관 분포



□ 17개 권역별 종합청렴도 현황

- 17개 권역별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시도교육청의 종합청렴도 평균을 비교한 결과, 대구·세종·제주권역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고, 강원·인천권역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종합청렴도**

-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대부분 유형에서 전년 대비 점수 하락
- 기초자치단체(76.9점)는 전년 대비 점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청렴체감도**

- 기관 내부 공직자가 평가한 내부체감도는 전년 대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평가하는 외부체감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차이, -23.7점)
- 모든 기관 유형에서 민원인이 평가한 외부체감도 하락, 중앙행정기관 제외한 대부분 유형에서 내부 공직자가 평가한 내부체감도 상승

□ **청렴노력도**

- 전체 기관 평균은 82.2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기관 유형별로는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대부분 유형에서 점수 하락

(단위 : 점, 괄호안은 전년대비 점수 변화 폭)

유형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전체	외부	내부	
전체(498)	80.5 (-0.7)	80.0 (-2.1)	87.0 (-3.3)	63.3 (+0.7)	82.2 (-)
중앙(46)	80.7 (-2.9)	80.6 (-2.6)	87.5 (-3.2)	64.3 (-0.9)	82.5 (-4.5)
광역(17)	78.6 (-2.5)	77.2 (-3.0)	81.9 (-5.1)	66.0 (+1.9)	82.0 (-5.6)
기초(226)	76.9 (+0.3)	76.5 (-2.5)	83.8 (-3.9)	59.1 (+0.6)	78.5 (+2.6)
교육청(17)	82.1 (-1.8)	79.4 (-0.9)	83.4 (-1.8)	69.9 (+1.3)	88.9 (-2.6)
공직(192)	84.6 (-1.1)	84.3 (-1.3)	91.5 (-2.4)	67.3 (+1.3)	85.9 (-1.2)

□ 세부 항목별 평가 결과

- 외부 민원인은 '업무투명'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고, 내부 공직자는 '특혜제공'을 가장 낮게 평가

(단위 : 점)

구분	항목	측정 항목	'22년	'23년	비고
외부 체감도	부패 인식	부정청탁	94.3	92.7	-1.6
		특혜제공	93.2	90.9	-2.3
		갑질행위	94.2	91.6	-2.6
		사익추구	95.5	93.5	-2.0
		업무투명	-	86.8	신규 측정
		절차위반	93.1	90.8	-2.3
		소극행정	91.1	88.1	-3.0
	부패 경험	금품등 경험률	75.3	72.7	-2.6
		경험 빈도	78.3	75.3	-3.0
	내부 체감도	부패 인식	부정청탁	66.4	70.3
특혜제공			55.8	55.4	-0.4
갑질행위			63.0	62.6	-0.4
사익추구			79.0	79.2	+0.2
부당지시			69.8	71.4	+1.6
인사위반			63.0	64.5	+1.5
예산 부당집행			76.1	75.8	-0.3
부패 경험		금품등 경험률	63.9	63.5	-0.4
		경험 빈도	68.1	66.7	-1.4

□ 부패경험률 항목별 분석

- (전체) 민원인이 공공기관과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겪은 부패 경험률은 0.42%지만, 내부 공직자가 인사·예산집행 등 조직 운영 과정에서 겪은 부패경험률은 1.99%로 훨씬 크게 나타남
- (외부체감도) 전통적 부패 범주인 금품·향응·편의에 대한 경험률이 모두 0.1% 이상으로 높은 편. 특히, 숙박·교통 등 편의 제공 항목이 가장 큰 폭으로 악화
- (내부체감도) 직접적 금품 제공에 비해, 편의제공·향응제공·사적이익 추구의 경험률이 더 높게 나타남. 전년에 비해 악화된 항목은 사적이익 추구하고 미공개정보 제공 항목

(단위 : %, %p)

구분	항목	'22년	'23년	비고
외부 체감도	계	0.31	0.42	+0.11
	금품	0.13	0.15	+0.02
	향응	0.10	0.14	+0.04
	편의	0.11	0.18	+0.07
	채무면제·채용청탁 등 사적이익	0.05	0.08	+0.03
	미공개정보 제공	0.04	0.06	+0.02
내부 체감도	계	2.11	1.99	-0.12
	금품	0.62	0.56	-0.06
	향응	0.82	0.67	-0.15
	편의	1.18	1.01	-0.17
	채무면제·채용청탁 등 사적이익	0.38	0.67	+0.29
	미공개정보 제공	0.14	0.15	+0.01

□ 지방자치단체 업무별 부패경험률

○ 광역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공통으로 측정하는 외부 업무 72개를 상호 비교한 결과, 공사관리 및 감독(1.02%)의 부패경험률이 가장 높음
- 한편, 보조금 지원 업무(+0.45%p)에 대한 부패경험률이 가장 크게 악화

(단위 : %, %p)

구분	2022	2023	비고
계	0.45	0.68	+0.23
공사관리 및 감독	0.77	1.02	+0.25
용역관리 및 감독	0.53	0.62	+0.09
보조금 지원	0.09	0.54	+0.45
민원업무	0.19	0.42	+0.23

○ 기초자치단체

- 22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공통으로 측정하는 외부 업무 904개를 상호 비교한 결과, 재·세정 업무(0.62%)의 부패경험률이 가장 높음
- 한편, 보조금 지원 업무(+0.33%p)에 대한 부패경험률이 가장 크게 악화

(단위 : %, %p)

구분	2022	2023	비고
계	0.35	0.51	+0.16
재·세정	0.31	0.62	+0.31
보조금 지원	0.24	0.57	+0.33
인허가	0.35	0.54	+0.19
계약 및 관리	0.39	0.46	+0.07

□ **평가지표별 세부 결과**

연번	지표명	점수	비고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 모든 평가 대상기관에서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 - 92.6%(461개) 기관에서 기관장 주관 반부패 추진 계획 등 회의 운영	93.2	정량
2	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개선 - 다양한 자료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 분석을 통해 과제 도출 - 기관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한 부패 유발요인 개선 과제 추진	75.4	정성
3	기관장·고위직의 관심과 노력도 - 부패 취약분야 개선 과정의 기관장의 의지와 솔선수범 사례 평가	75.1	정성
4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 평가 대상기관 고위공직자 중 96.3%(10,913명)이 부패방지 교육 이수 - 평가 대상기관의 96.4%(480개)가 기관별 교육 이수 현황 공개	91.1	정량
5	부패 유발요인 정비 - 306개 행정기관(중앙, 지자체, 교육청) 중 87.9%에서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을 각급기관 자체 채용규정 등에 반영 - 192개 공직유관단체 중 98.4%는 채용과정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토록 자체 감사규정 등에 규정화 완료 등	91.4	정량
6	공공재정 부정수급 자체점검 노력 제고 - 평가 대상기관 대부분(94.0%, 468개)이 연간 1회 이상 점검 실시 - 260개 지자체·교육청 중 51.9%(135개) 기관에서 전년대비 부가금 부과 실적 증가	87.1	정량
7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 평가대상 272개 기관 중 대부분(96.7%, 263개)이 청렴시민감사관 권고 1회 이상 수용 등	96.9	정량
8	부패방지 제도 구축 -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3,356건 중 2,875건(85.7%) 이행 등	87.6	정량
9	반부패 정보공개 및 접근성 제고 노력 - 각급기관의 청렴활동(2,017건), 기관 부패 신고사례(1,385건), 반부패 관련 지침(450개 기관 672건) 등 공유	86.3	정량
10	감점 지표(3) : 부패신고 등 처리 내실화,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0.1	정량
11	가점 지표(3) :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 공공분야 갑질개선 노력 강화, 적극행정 구현 노력	+0.4	정량
12	시책효과성 설문(5) : 취약분야 개선, 기관장 노력, 청렴교육 이행, 신고자보호 노력, 갑질 개선노력에 대한 내부구성원의 평가	66.1	설문

□ 청렴노력도 평가 우수사례 10선

< 부패 취약분야 개선 >

- ① [고용노동부] 신고 업무처리 프로세스 개선으로 투명성 강화
 - 근로감독 업무 관련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회신 등이 방문·우편접수로 이루어져 처리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높지 않다는 문제점 진단
 - ※ 근로감독 분야는 청렴체감도 측정 업무(7개) 중 매년 5~7위로 평가, 국화언론 등 다수 지적
 - 「노동포털」 신규 개선을 통해 모바일로 근로감독 관련 신고·접수, 진행상황 확인 및 각종 확인서 발급까지 가능토록 개편(23.5.)
- ② [국세청] 국고수납 공무원의 횡령 및 사적유용 방지체계 마련
 - 전국 133개 세무서 관리실태 전수점검(23.3.~4월) 및 국고금 수납업무 이원화(전산입력, 통장출금 담당자 분리)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월별 순환근무제 도입
 - 국고금 출금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발생 시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는 「국고금 출금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23.9.)
- ③ [경상북도] 종합적 갑질 예방 대책 마련
 - 내부체감도 개선을 위한 전 직원 실태조사 실시, 갑질 예방 가이드 라인 및 익명성 보장 청렴 챗봇 개설, 간부·직원 간 다양한 소통기기 마련(60회)
 - 시·군간 협력체계 구축, 익명성 보장을 위해 갑질 상담 안심 노무사 도입 등 추진
 - ※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비율 : '21년 17.4% → '23년 10.9%로 감소
- ④ [경상남도교육청] 수요자 의견수렴을 통한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
 - 내·외부 의견수렴, 감사사례 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계약업무 투명성 저하 취약요인(과도한 증빙서류 요구, 요청서류 상이 등) 도출 및 TF 구성(12명)
 - 기존 10종이었던 계약관련 제출 서류를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로 통합하고, 업무 처리절차 표준화를 통해 계약업무 처리 투명성 제고
 - ※ 업무프로세스 개선 만족도 : 계약상대방 88.7%, 계약담당자 90.7%
- ⑤ [한국남부발전·한국남동발전] AI 기반 입찰담합포착시스템 도입·운영
 - 과거 전자입찰 데이터 DB화·분석을 통한 담합 패턴 도출 및 의심모델 정형화, 알고리즘 AI 학습을 통해 담합행위 발전사 간 공동대응 체계 구축
 - ※ 업체간 투찰시간 및 가격 편차, 재입찰 시 입찰가격 편차 등을 종합 분석
 - 계량화된 유형별 담합 확률 정보를 확인하고, 담합 포착 시 담합 심의위원회 구성 및 공정위 제소여부 결정에 활용

- ⑥ [한국은행] 반부패 법령 검색 기반 대화형 플랫폼 「청렴 Chat GPT」 개발·도입
 - '계약 및 관리', '예산집행' 등 부패 취약분야 업무에서의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부패 노출 예방을 위해 반부패 관련 법령·규정 검토, 사례조사 등이 가능토록 AI 기술을 활용한 Chat GPT 개발(23.9.)
 - 1회 검색을 통해 가장 관련성 높은 규정 뿐만 아니라 타 규정에서 규율하는 기타 준수사항 및 각종 신고서식 등을 동시에 표출
- ⑦ [대한적십자사] 자체적발 부패사건의 적극적 제도개선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 병가 사용 부적정 사례를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하고, 최근 3년간 휴가 내역 등 전수조사를 통해 제도적 보완방안 발굴
 - ※ 감사 지적사항 : 위조 진단서를 통해 총 11차례 106일의 허위병가 시행 적발
 - ※ 전수조사 : 총 641명 935건 진단서 진위 확인 및 기관별 병가사용 현황 등 분석
 - 간부·직원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지침 개정 및 인사·복무 관리시스템 개선까지 연계, 개선과정을 청렴교육 콘텐츠로 제작·활용하여 직원 공감대 형성

< 기관장의 청렴시책 추진 노력 >

- ⑧ [기획재정부] 기관장 주관 반부패·청렴 추진체계 신설·운영
 - 부총리 주재 반부패 TF(3회 회의) 및 1차관 주재 청렴도 TF(4회 회의), 청렴전담팀 신설(4급 1명, 5급 2명) 등 청렴추진체계 전면 개편
 - 청렴업무 담당자 인사가점 부여, 실국장 주관 청렴 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내부 성과평가 반영(23.6. 성과평가지침 개정) 등 청렴업무 추진 기반 조성
- ⑨ [한국국토정보공사] 주요 업무별 부패취약분야 분석 및 맞춤형 대책 마련
 - 각 업무파트별 특성을 반영한 부패리스크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위한 회의를 기관장이 직접 주관(각 본부별 총 4회)하여 청렴시책 추진 동력 마련
 - ※ 구분 : ESG 경영 / 지적사업 / 공간정보 / 인사·자원관리별로 취약분야 개선
- 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관장 주도 부패취약분야 개선
 - 장례식장의 금품수수 관행 개선을 위해 기관장의 강력한 개선의지 표명, 병원장 등 산하기관장 면담, 해당분야 직원 간담회 등으로 제도개선 과제(6개) 도출
 - 이사장 주관 업무 담당자 특강 실시, 기관장 직통 신고채널 개설, 장례협회 등과 MOU 체결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 등 대응체계 개편
 - ※ 장례식장 청렴 개선도는 '22년 93.8점 → '23년 96.0점, 금품수수 경험은 '22년 하반기 7건 → '23년 상반기 0건으로 개선(유족 등 665명 대상 설문조사)

부패공직자 실태 평가 결과

(외부 적발되어 징계, 기소, 유죄 판결된 부패사건을 감점으로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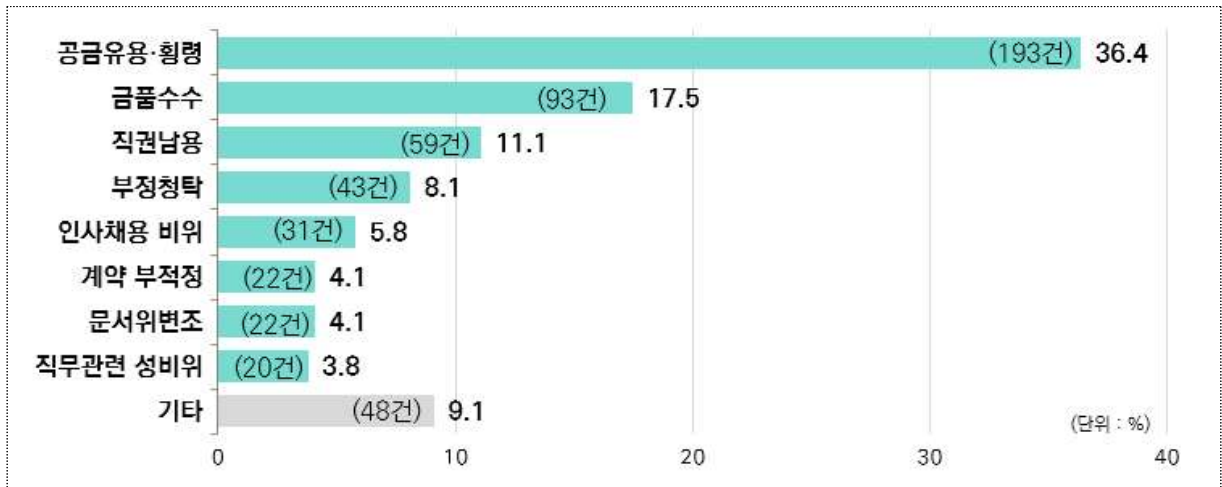
□ 부패사건 발생 현황 : 160개 기관, 531건

- 전년 대비 감점 기관 수는 줄어든 반면, 사건 수는 늘어남

※ ('22년) 192개 기관, 433건 → ('23년) 160개 기관, 53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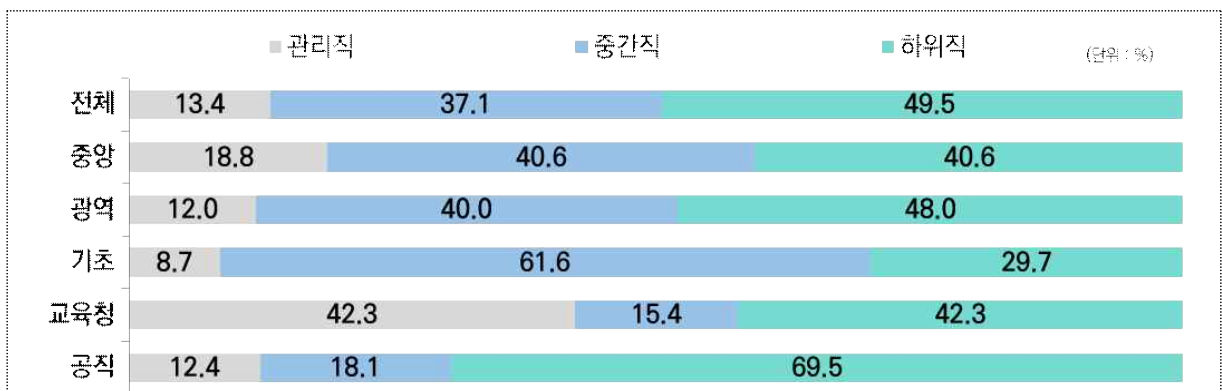
□ 부패행위 유형별 현황

- 공금 유용·횡령(36.4%)과 금품수수(17.5%) 등 금전적 부패 사건이 절반 이상 차지



□ 부패행위자 직위별 현황

- 부패행위자는 전반적으로 하위직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5~6급의 중간직(61.6%)이 가장 큰 비율로 나타남



□ 기관별 감점 현황

- 160개 기관은 부패공직자로 인해 평균 1.1점 감점을 받았으며, 3점 이상 감점을 많이 받은 기관은 18개 기관(11.2%)

< 감점 규모별 기관 분포표 >

구분	계	0.1~0.4	0.5~0.9	1~1.9	2~2.9	3~4.9	5~10
기관 수(개)	160	79	28	21	14	<u>13</u>	<u>5</u>
비율(%)	100.0	49.4	17.5	13.1	8.8	<u>8.1</u>	<u>3.1</u>

○ 주요 감점 사례

- ○○단 상임이사는 직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 및 자회사 직원 등 20명에게 약 4.1억원을 무이자·무기한 차용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인사·계약상 특혜 제공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음. 또한, 상임이사 지시에 따라 부당하게 인사업무를 처리한 직원 및 상임이사에 대한 조사를 부실 처리한 직원 등 8명이 징계 처분(부패행위자 9명, 감점 10.0점)
- △△청 청장은 승진인사를 빌미로 금품등을 수수하고 인사청탁·금품등 수수 과정에서 소속 직원 2명도 연루. 또한, 이와 별개로 업체대표 및 브로커와 유착하여 저지른 입찰·계약 비리 행위 및 내부문건 유출 사건 발생. 이상 2가지 사건으로 전 △△청장 2인 등 기소 3명·징계 4건(부패행위자 7명, 감점 7.8점)
- □□공단 상임이사는 부하직원을 통해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부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도 금품을 수수함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부패행위자 14명, 감점 4.6점)
- ◇◇공사 소속 직원 139명은 부정 취득한 자격증으로 월 3만원의 자격수당을 약 8개월간 부정 수령해 온 것이 경찰 수사 결과 적발되어 무더기 징계(부패행위자 139명, 감점 3.8점)
- ▽▽군 공무원은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관내 주민 23명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뇌물로 받아 인근 횃집에서 현금으로 바꾸는 등의 행위로 징역3년 선고(부패행위자 13명, 감점 3.6점)

1. 중앙행정기관 I (장관급) : 25개 기관

※ 기관명 가나다순, 괄호 안은 '22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년 단 위	공정거래위원회 (▲1등급)	금융위원회 (▲1등급)	-	부패 실태 평가 (감점)
2 년 단 위	고용노동부 (-) 국무조정실 (▼1등급) 금융위원회 (▲1등급) 기획재정부 (▲1등급) 중소벤처기업부 (-) 환경부 (▲1등급)	검찰청 (-) 고용노동부 (▲1등급)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보훈부 (-) 기획재정부 (▲1등급) 농림축산식품부 (▲1등급) 방송통신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 (▲1등급) 통일부 (▲2등급) 환경부 (▲1등급)	고용노동부 (-) 공정거래위원회 (-) 국무조정실 (-) 국토교통부 (▲1등급) 금융위원회 (▲1등급) 기획재정부 (▲2등급) 중소벤처기업부 (-) 해양수산부 (-) 행정안전부 (▲1등급)	
3 년 단 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등급) 검찰청 (▲1등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보훈부 (▼1등급) 국방부 (▼1등급) 농림축산식품부 (-) 문화체육관광부 (▲1등급) 방송통신위원회 (▼1등급) 보건복지부 (▼1등급) 해양수산부 (-) 행정안전부 (▲1등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등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등급) 교육부 (-) 국무조정실 (▼1등급) 문화체육관광부 (▲1등급) 보건복지부 (-) 외교부 (▲2등급) 해양수산부 (-) 행정안전부 (▲2등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등급) 교육부 (-) 국가보훈부 (▼1등급) 국방부 (▼1등급) 농림축산식품부 (-) 문화체육관광부 (▲1등급)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2등급) 환경부 (-)	
4 년 단 위	교육부 (▼1등급) 국토교통부 (-) 법무부 (▼1등급) 여성가족부 (-) 외교부 (-) 통일부 (-)	국방부 (▼1등급) 법무부 (▼1등급) 여성가족부 (▼1등급)	검찰청 (▲1등급) 방송통신위원회 (▼1등급) 법무부 (▼1등급) 외교부 (-)	
5 년 단 위	산업통상자원부 (▼1등급)	국토교통부 (▼1등급) 산업통상자원부 (▼2등급)	산업통상자원부 (▼2등급) 통일부 (▼2등급)	

2. 중앙행정기관Ⅱ(차관급) : 21개 기관

※ 기관명 가나다순, 괄호 안은 '22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분야	질병관리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등급)	-	부패 실태 평가 (감점)
2 분야	관세청 (-) 기상청 (▲2등급) 농촌진흥청 (-) 법제처 (-) 인사혁신처 (▲2등급) 통계청 (▼1등급)	농촌진흥청 (-) 법제처 (-) 소방청 (▲2등급) 인사혁신처 (▲3등급) 질병관리청 (▼1등급) 통계청 (-)	관세청 (-) 국세청 (▲1등급) 기상청 (▲1등급) 농촌진흥청 (-) 방위사업청 (▲1등급) 법제처 (-) 인사혁신처 (▲1등급) 조달청 (▲3등급) 질병관리청 (-)	
3 분야	국세청 (▲1등급) 방위사업청 (▲1등급) 원자력안전위원회 (-) 조달청 (▲1등급) 해양경찰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등급)	관세청 (▼1등급) 기상청 (▲2등급) 문화재청 (▲1등급) 병무청 (▼1등급) 원자력안전위원회 (-) 조달청 (-) 특허청 (▼1등급) 해양경찰청 (▲1등급)	경찰청 (▼1등급) 산림청 (▲1등급) 새만금개발청 (-) 소방청 (▼1등급) 식품의약품안전처 (▲1등급) 원자력안전위원회 (▲1등급) 통계청 (▼1등급) 해양경찰청 (▼1등급)	
4 분야	경찰청 (-) 문화재청 (-) 병무청 (▼2등급) 산림청 (▼1등급) 새만금개발청 (▼1등급) 소방청 (▼1등급) 식품의약품안전처 (-) 특허청 (▼1등급)	경찰청 (▼1등급) 국세청 (▼2등급) 방위사업청 (-) 산림청 (▼1등급)	문화재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등급)	
5 분야	-	새만금개발청 (▼2등급) 식품의약품안전처 (▼2등급)	병무청 (▼2등급) 특허청 (▼1등급)	

3. 광역자치단체 : 17개 기관

※ 기관명 가나다순, 괄호 안은 '22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등급	-	-	경상북도 (▲2등급)	부패 실태 평가 (감점)
2 등급	경상북도 (-) 대구광역시 (▲2등급) 세종특별자치시 (▲1등급) 제주특별자치도 (-)	경기도 (-) 대전광역시 (▲2등급) 부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1등급) 울산광역시 (▲1등급) 충청남도 (▲1등급) 충청북도 (▲1등급)	경상남도 (-) 대구광역시 (▲2등급) 부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1등급) 제주특별자치도 (-)	
3 등급	경기도 (-) 경상남도 (▼1등급) 광주광역시 (▼1등급) 부산광역시 (-) 서울특별시 (-) 울산광역시 (▲2등급) 전라북도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 대구광역시 (▲2등급) 전라북도 (▲1등급) 제주특별자치도 (▼1등급)	광주광역시 (▼2등급) 서울특별시 (▼1등급) 울산광역시 (▲2등급) 전라북도 (-) 충청남도 (-)	
4 등급	강원특별자치도 (▼1등급) 대전광역시 (-) 전라남도 (▼2등급)	경상남도 (▼2등급) 경상북도 (▼2등급) 서울특별시 (-) 전라남도 (▼2등급)	경기도 (▲1등급) 대전광역시 (▼1등급) 인천광역시 (▼2등급) 전라남도 (▼1등급) 충청북도 (-)	
5 등급	인천광역시 (▼2등급)	강원특별자치도 (▼1등급) 인천광역시 (▼1등급)	강원특별자치도 (▼2등급)	

4. 기초자치단체 I(시) : 75개 기관

※ 기관명 가나다순, 괄호 안은 '22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반기	경기 여주시 (-) 경남 사천시 (▲2등급) 경북 경주시 (-)	경남 사천시 (▲1등급)	-	부패 실태 평가 (감점)	
2 반기	강원 동해시 (▲2등급) 경기 고양시 (-) 경기 광명시 (▲1등급) 경기 부천시 (-) 경기 안산시 (-) 경기 안양시 (▼1등급) 경기 오산시 (▲1등급) 경기 포천시 (▲3등급) 경기 화성시 (-) 경남 거제시 (▲2등급) 경남 김해시 (▼1등급) 경남 밀양시 (▲1등급) 경남 양산시 (▲1등급) 경남 창원시 (▼1등급) 경남 통영시 (-) 경북 상주시 (▲2등급) 전남 순천시 (▲2등급) 전남 여수시 (▲1등급) 전북 김제시 (▲2등급) 전북 전주시 (▲2등급) 전북 정읍시 (▲2등급) 충남 당진시 (-) 충남 아산시 (▲1등급)	= 강원 동해시 (▲2등급) 강원 춘천시 (▲1등급) 경기 고양시 (▲1등급) 경기 과천시 (▲1등급) 경기 광명시 (▲2등급) 경기 구리시 (▼1등급) 경기 동두천시 (▲1등급) 경기 부천시 (-) 경기 성남시 (-) 경기 수원시 (-) 경기 안산시 (-) 경기 여주시 (▼1등급) 경기 오산시 (▲1등급) 경기 용인시 (▲1등급) 경기 하남시 (▲1등급) 경기 화성시 (▲1등급) 경남 김해시 (▼1등급) 경남 양산시 (▲1등급) 경남 창원시 (-) 경남 통영시 (-) 경북 경산시 (▼1등급) 경북 경주시 (-) 경북 상주시 (▲2등급) 전남 여수시 (▲2등급) 전북 김제시 (▲1등급) 전북 전주시 (▲1등급) 전북 정읍시 (▲3등급) 충남 당진시 (▲1등급) 충남 아산시 (-)	+ 경기 고양시 (-) 경기 광주시 (▲2등급) 경기 부천시 (-) 경기 안산시 (▼1등급) 경기 안양시 (▼1등급) 경기 양주시 (▲1등급) 경기 여주시 (-) 경기 오산시 (▲1등급) 경기 의정부시 (-) 경기 포천시 (▲2등급) 경남 거제시 (▲1등급) 경남 김해시 (▼1등급) 경남 밀양시 (▲1등급) 경남 사천시 (▲2등급) 경남 양산시 (▲1등급) 경남 진주시 (▲1등급) 경남 창원시 (▼1등급) 경북 경주시 (▼1등급) 경북 구미시 (-) 경북 김천시 (▲1등급) 전남 나주시 (▲2등급) 전남 순천시 (▲1등급) 전북 군산시 (▲2등급) 전북 김제시 (▲3등급) 전북 익산시 (▲1등급) 전북 정읍시 (-)		-
3 반기	강원 춘천시 (▲1등급) 경기 과천시 (-) 경기 광주시 (▲1등급) 경기 군포시 (-) 경기 김포시 (-) 경기 동두천시 (-) 경기 성남시 (▲1등급) 경기 수원시 (▼1등급) 경기 시흥시 (-) 경기 안성시 (▼1등급) 경기 양주시 (▲1등급) 경기 용인시 (▲2등급) 경기 의왕시 (-)	강원 삼척시 (▲1등급) 강원 속초시 (-) 경기 군포시 (▼1등급) 경기 김포시 (▼1등급) 경기 남양주시 (-) 경기 안산시 (-) 경기 안양시 (▼1등급) 경기 이천시 (▼2등급) 경기 파주시 (▼1등급) 경기 평택시 (▼1등급) 경기 포천시 (▲1등급) 경남 거제시 (▲1등급) 경남 밀양시 (-)	강원 동해시 (▲1등급) 강원 춘천시 (▲2등급) 경기 과천시 (-) 경기 광명시 (▼1등급) 경기 군포시 (-) 경기 김포시 (-) 경기 남양주시 (-) 경기 성남시 (-) 경기 시흥시 (-) 경기 안성시 (▼1등급) 경기 용인시 (-) 경기 의왕시 (-) 경기 파주시 (-)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3 등급	경기 의정부시 (▼1등급) 경기 이천시 (-) 경기 파주시 (▼1등급) 경기 평택시 (▼1등급) 경기 하남시 (-) 경남 진주시 (-) 경북 구미시 (▼1등급) 경북 영주시 (-) 경북 영천시 (-) 경북 포항시 (▼1등급) 전남 나주시 (▲2등급) 전북 익산시 (-) 충남 보령시 (-) 충남 서산시 (▼1등급) 충남 천안시 (▼2등급) 충북 청주시 (▼1등급) 충북 충주시 (▲1등급)	경남 진주시 (▼1등급) 경북 영천시 (▲1등급) 경북 포항시 (-) 전남 광양시 (▲2등급) 전남 나주시 (▲2등급) 충남 공주시 (-) 충남 서산시 (▼1등급) 충남 천안시 (▼1등급)	경기 평택시 (▼1등급) 경기 하남시 (-) 경기 화성시 (▼1등급) 경남 통영시 (-) 경북 상주시 (▲1등급) 경북 안동시 (-) 경북 영주시 (-) 경북 영천시 (-) 경북 포항시 (▼1등급) 전남 광양시 (-) 전남 여주시 (-) 전북 전주시 (▲1등급) 충남 논산시 (-) 충남 당진시 (▼1등급) 충남 보령시 (-) 충남 서산시 (-) 충남 아산시 (-) 충북 청주시 (▼1등급) 충북 충주시 (▲1등급)	부패 실태 평가 (감점)
4 등급	강원 강릉시 (-) 강원 속초시 (-) 강원 원주시 (-) 경기 구리시 (▼2등급) 경기 남양주시 (▼1등급) 경북 경산시 (▼1등급) 경북 김천시 (▼1등급) 경북 안동시 (▼1등급) 전남 광양시 (▼1등급) 전북 군산시 (-) 충남 계룡시 (-) 충남 논산시 (▼1등급) 충북 제천시 (▼1등급)	= 강원 강릉시 (▼1등급) 강원 원주시 (-) 경기 광주시 (-) 경기 시흥시 (▼1등급) 경기 의왕시 (▼2등급) 경기 의정부시 (▼1등급) 경북 구미시 (-) 경북 안동시 (▼1등급) 경북 영주시 (▼1등급) 전남 목포시 (-) 전남 순천시 (▲1등급) 전북 익산시 (▼1등급) 충남 계룡시 (-) 충남 논산시 (▼1등급) 충남 보령시 (-) 충북 제천시 (▼1등급) 충북 청주시 (▼2등급) 충북 충주시 (▼1등급)	+ 강원 강릉시 (-) 강원 속초시 (-) 강원 원주시 (-) 경기 구리시 (▼1등급) 경기 동두천시 (▼1등급) 경기 수원시 (▼2등급) 경기 이천시 (-) 전북 남원시 (▼1등급) 충남 계룡시 (-) 충남 천안시 (▼2등급) 충북 제천시 (-)	
5 등급	강원 삼척시 (-) 강원 태백시 (▼2등급) 경북 문경시 (-) 전남 목포시 (▼2등급) 전북 남원시 (▼1등급) 충남 공주시 (▼3등급)	강원 태백시 (▼3등급) 경기 양주시 (-) 경북 김천시 (▼1등급) 경북 문경시 (-) 전북 군산시 (-) 전북 남원시 (▼1등급)	강원 삼척시 (-) 강원 태백시 (▼1등급) 경북 경산시 (▼2등급) 경북 문경시 (-) 전남 목포시 (▼2등급) 충남 공주시 (▼2등급)	

5. 기초자치단체Ⅱ(군) : 82개 기관

※ 기관명 가나다순, 괄호 안은 '22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반기	경북 예천군 (▲1등급) 전남 보성군 (-) 충남 부여군 (-) 충북 진천군 (▲2등급)	경북 예천군 (▲1등급) 부산 기장군 (▲1등급) 전남 보성군 (▲1등급) 충북 옥천군 (▲2등급) 충북 진천군 (▲1등급)	-	부패 실태 평가 (감점)	
	경기 양평군 (▲2등급) 경남 거창군 (-) 경남 남해군 (▼1등급) 경남 산청군 (-) 경남 창녕군 (▲1등급) 경남 하동군 (-) 경남 함안군 (▼1등급) 경북 성주군 (-) 경북 청송군 (▲1등급) 경북 칠곡군 (▲2등급) 대구 군위군 (▲2등급) 대구 달성군 (▲1등급) 부산 기장군 (▲1등급) 전남 고흥군 (▲1등급) 전남 영광군 (-) 전남 영암군 (▲1등급) 전남 장성군 (-) 전남 진도군 (▲2등급) 전남 함평군 (▲2등급) 전북 부안군 (-) 충남 서천군 (▲1등급) 충남 예산군 (▼1등급) 충남 홍성군 (▲1등급) 충북 옥천군 (-) 충북 음성군 (-)	=	강원 양구군 (▲1등급) 강원 철원군 (▲1등급) 강원 평창군 (-) 경기 연천군 (-) 경남 남해군 (-) 경남 산청군 (-) 경남 창녕군 (▲1등급) 경남 하동군 (▲1등급) 경남 함안군 (▼1등급) 경북 청송군 (▲2등급) 대구 군위군 (▲1등급) 전남 강진군 (▲1등급) 전남 영광군 (▲1등급) 전남 영암군 (▲1등급) 전남 진도군 (▲3등급) 전남 함평군 (▲1등급) 충남 부여군 (▼1등급) 충남 예산군 (▼1등급) 충남 청양군 (▲1등급) 충남 홍성군 (▲1등급) 충북 괴산군 (-) 충북 보은군 (-) 충북 음성군 (▲1등급)		+
2 반기	강원 인제군 (▲2등급) 강원 정선군 (-) 강원 철원군 (▲1등급) 강원 평창군 (▼2등급) 강원 홍천군 (-) 강원 횡성군 (▲2등급) 경남 고성군 (-) 경남 의령군 (-) 경남 함양군 (-) 경남 합천군 (-) 경북 고령군 (-) 경북 울진군 (▲2등급)	강원 고성군 (▲1등급) 강원 양양군 (-) 강원 홍천군 (▼1등급) 강원 화천군 (-) 경남 거창군 (▼1등급) 경남 고성군 (▼1등급) 경북 성주군 (-) 경북 영양군 (-) 경북 의성군 (▲1등급) 경북 칠곡군 (▲1등급) 대구 달성군 (-) 울산 울주군 (-)	강원 인제군 (▲1등급) 강원 정선군 (▲1등급) 강원 평창군 (▼1등급) 강원 홍천군 (▲1등급) 강원 횡성군 (▲1등급) 경남 고성군 (▲1등급) 경남 함안군 (-) 경남 합천군 (▼1등급) 경북 고령군 (-) 경북 영덕군 (-) 경북 울진군 (▲2등급) 경북 의성군 (▼1등급)		
	3 반기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3 분야	경북 의성군 (▲1등급) 경북 청도군 (-) 인천 강화군 (▲1등급) 전남 강진군 (▲1등급) 전남 구례군 (-) 전남 담양군 (▼1등급) 전남 무안군 (▲1등급) 전남 완도군 (-) 전남 해남군 (▼1등급) 전남 화순군 (-) 전북 고창군 (-) 전북 무주군 (-) 전북 완주군 (▲1등급) 전북 임실군 (-) 전북 장수군 (-) 전북 진안군 (-) 충남 금산군 (-) 충남 청양군 (-) 충북 괴산군 (-) 충북 보은군 (▼1등급) 충북 증평군 (▼1등급)	인천 옹진군 (-) 전남 고흥군 (▲1등급) 전남 곡성군 (▼1등급) 전남 구례군 (▼1등급) 전남 담양군 (▼1등급) 전남 무안군 (▲1등급) 전남 화순군 (▲1등급) 전북 고창군 (▼1등급) 전북 무주군 (▲2등급) 전북 부안군 (▼1등급) 전북 순창군 (▼1등급) 전북 완주군 (▲1등급) 전북 임실군 (-) 충남 서천군 (-) 충북 영동군 (▲1등급) 충북 증평군 (▼2등급)	경북 청도군 (▼1등급) 부산 기장군 (▲1등급) 인천 강화군 (▲1등급) 전남 강진군 (-) 전남 고흥군 (-) 전남 구례군 (-) 전남 담양군 (-) 전남 무안군 (-) 전남 영암군 (-) 전남 장흥군 (▼1등급) 전남 진도군 (-) 전남 화순군 (▼1등급) 전북 고창군 (▲1등급) 전북 완주군 (-) 전북 임실군 (▲1등급) 전북 진안군 (-) 충남 청양군 (-) 충북 영동군 (-) 충북 옥천군 (▼1등급) 충북 증평군 (-)		
4 분야	강원 고성군 (-) 강원 양구군 (-) 경기 가평군 (▼2등급) 경기 연천군 (▼2등급) 경북 영덕군 (-) 경북 영양군 (-) 울산 울주군 (-) 인천 옹진군 (▼1등급) 전남 곡성군 (▼2등급) 전남 장흥군 (-) 충남 태안군 (▼2등급) 충북 단양군 (▼1등급) 충북 영동군 (▼1등급)	=	강원 고성군 (-) 강원 영월군 (▼2등급) 강원 철원군 (-) 경기 가평군 (▼2등급) 경기 연천군 (-) 경북 봉화군 (▲1등급) 경북 울릉군 (-) 울산 울주군 (▼1등급) 인천 옹진군 (-) 전남 곡성군 (-) 전북 무주군 (▼2등급) 충남 태안군 (▼2등급) 충북 괴산군 (▼1등급) 충북 단양군 (-) 충북 보은군 (▼1등급)	+	
5 분야	강원 양양군 (▼1등급) 강원 영월군 (▼1등급) 강원 화천군 (-) 경북 봉화군 (-) 경북 울릉군 (-) 전남 신안군 (▼2등급) 전북 순창군 (▼2등급)	강원 영월군 (-) 경남 의령군 (-) 경남 함양군 (▼2등급) 경북 울릉군 (-) 전남 장흥군 (-)	강원 양구군 (-) 강원 양양군 (▼1등급) 강원 화천군 (-) 경북 영양군 (▼1등급) 전남 신안군 (▼1등급) 전북 순창군 (▼1등급)	-	부패 실태 평가 (감점)

6. 기초자치단체(구) : 69개 기관

※ 기관명 가나다순, 괄호 안은 '22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 번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번	서울 강남구 (▲2등급) 서울 광진구 (▲1등급) 서울 구로구 (-)	부산 영도구 (▲1등급) 부산 해운대구 (▲2등급)	광주 광산구 (▲1등급) 대구 북구 (▲1등급) 서울 강남구 (▲1등급) 서울 광진구 (▲1등급)	부패 실태 평가 (감점)	
2 번	광주 광산구 (▲1등급) 광주 동구 (-) 광주 북구 (-) 광주 서구 (▲2등급) 대구 동구 (-) 대구 북구 (▼1등급) 대전 대덕구 (▲1등급) 대전 서구 (-) 부산 동래구 (▲2등급) 부산 부산진구 (▲1등급) 부산 수영구 (▲1등급) 부산 해운대구 (▲1등급) 서울 강동구 (▲1등급) 서울 동작구 (-) 서울 서초구 (-) 서울 성동구 (-) 서울 송파구 (▲2등급) 서울 중랑구 (▲1등급) 인천 남동구 (-)	= 대구 달서구 (▼1등급) 대구 동구 (▲1등급) 대구 수성구 (▲1등급) 대구 중구 (-) 대전 대덕구 (-) 부산 동래구 (-) 부산 부산진구 (▲1등급) 부산 북구 (▼1등급) 부산 수영구 (-) 서울 구로구 (-) 서울 동작구 (▲2등급) 서울 서초구 (▲1등급) 서울 용산구 (-) 서울 중랑구 (▲1등급) 울산 동구 (▲1등급) 인천 남동구 (-) 인천 부평구 (-) 인천 연수구 (▲1등급)	+ 광주 동구 (-) 광주 북구 (▼1등급) 광주 서구 (▲1등급) 대구 동구 (-) 대구 서구 (▲1등급) 대전 서구 (-) 부산 부산진구 (▲1등급) 서울 강서구 (-) 서울 구로구 (-) 서울 동대문구 (▲1등급) 서울 서초구 (▲1등급) 서울 성동구 (▲1등급) 서울 송파구 (▲3등급) 서울 양천구 (-) 서울 용산구 (-) 서울 은평구 (▲1등급) 서울 종로구 (▲1등급) 서울 중구 (▲2등급) 서울 중랑구 (▲1등급)		-
3 번	대구 남구 (▲1등급) 대구 달서구 (▼1등급) 대구 서구 (-) 대구 수성구 (▼1등급) 대구 중구 (▼1등급) 대전 동구 (▲1등급) 대전 유성구 (▲1등급) 대전 중구 (-) 부산 금정구 (-) 부산 남구 (-) 부산 북구 (-) 부산 사하구 (-) 부산 연제구 (▼1등급) 서울 강북구 (-) 서울 강서구 (▼1등급) 서울 관악구 (-) 서울 금천구 (-) 서울 노원구 (▲2등급) 서울 서대문구 (▼1등급) 서울 성북구 (▼1등급) 서울 양천구 (▼1등급) 서울 영등포구 (▼1등급)	광주 광산구 (-) 광주 동구 (-) 광주 서구 (▲1등급) 대구 남구 (▲2등급) 대구 북구 (▼1등급) 대전 동구 (-) 대전 서구 (▲1등급) 대전 중구 (▼1등급) 부산 강서구 (-) 부산 금정구 (-) 부산 남구 (▼1등급) 부산 사상구 (-) 부산 사하구 (▼1등급) 부산 연제구 (▼1등급) 부산 중구 (-) 서울 강남구 (-) 서울 강동구 (▼1등급) 서울 강서구 (-) 서울 관악구 (▲1등급) 서울 광진구 (▼1등급) 서울 금천구 (-) 서울 동대문구 (▲1등급)	광주 남구 (▼1등급) 대구 남구 (▲1등급) 대구 달서구 (▼1등급) 대구 중구 (-) 대전 대덕구 (▲1등급) 대전 유성구 (▲1등급) 대전 중구 (▲1등급) 부산 금정구 (▼1등급) 부산 남구 (-) 부산 동래구 (-) 부산 북구 (-) 부산 수영구 (▲1등급) 부산 연제구 (-) 부산 해운대구 (▼1등급) 서울 강동구 (-) 서울 강북구 (-) 서울 관악구 (▼1등급) 서울 금천구 (-) 서울 노원구 (-) 서울 도봉구 (-) 서울 동작구 (▼1등급) 서울 마포구 (▼1등급)		

구 번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3 번	서울 용산구 (▼2등급) 서울 은평구 (-) 서울 종로구 (-) 서울 중구 (▲1등급) 울산 동구 (▲2등급) 울산 북구 (▲1등급) 인천 미추홀구 (-) 인천 부평구 (-)	서울 성동구 (-) 서울 성북구 (-) 서울 송파구 (▲1등급) 서울 영등포구 (▼1등급) 서울 중구 (▲1등급) 울산 북구 (▲1등급) 울산 중구 (-) 인천 계양구 (-) 인천 동구 (▼1등급) 인천 서구 (▲1등급)	서울 서대문구 (▼1등급) 서울 성북구 (▼1등급) 서울 영등포구 (▼1등급) 울산 북구 (▲2등급) 인천 남동구 (▼1등급) 인천 미추홀구 (▲1등급) 인천 중구 (▲1등급)	부패 실태 평가 (감점)	
	광주 남구 (▼2등급) 부산 강서구 (-) 부산 동구 (▲1등급) 부산 사상구 (▼1등급) 부산 서구 (▼1등급) 부산 영도구 (▼2등급) 부산 중구 (▼1등급) 서울 도봉구 (-) 서울 동대문구 (-) 서울 마포구 (▼1등급) 울산 중구 (-) 인천 계양구 (▼1등급) 인천 동구 (▼1등급) 인천 서구 (▼1등급) 인천 연수구 (▼2등급) 인천 중구 (▼1등급)	=	광주 북구 (▼1등급) 대구 서구 (-) 대전 유성구 (-) 부산 동구 (▲1등급) 부산 서구 (▼2등급) 서울 강북구 (▼1등급) 서울 노원구 (▲1등급) 서울 서대문구 (▼1등급) 서울 양천구 (▼2등급) 서울 은평구 (▼1등급) 울산 남구 (-) 인천 미추홀구 (▼1등급)		+
	울산 남구 (▼1등급)	광주 남구 (▼2등급) 서울 도봉구 (-) 서울 마포구 (-) 서울 종로구 (▼1등급) 인천 중구 (▼2등급)	부산 강서구 (-) 부산 서구 (▼1등급) 부산 영도구 (▼2등급) 울산 남구 (▼1등급)		-

7. 시도교육청 : 17개 기관

※ 기관명 가나다순, 괄호 안은 '22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분야	-	부산시교육청 (▲4등급)	-	부패 실태 평가 (감점)
2 분야	경남도교육청 (▼1등급) 대구시교육청 (-) 부산시교육청 (▲2등급) 울산시교육청 (-) 전남도교육청 (▲2등급) 제주도교육청 (-) 충북도교육청 (▲2등급)	울산시교육청 (-) 제주도교육청 (-) 충남도교육청 (▲1등급) 충북도교육청 (▲2등급)	경기도교육청 (-) 경남도교육청 (-) 대구시교육청 (-) 세종시교육청 (▲1등급) 울산시교육청 (-) 전남도교육청 (-)	
3 분야	경기도교육청 (-) 대전시교육청 (-) 서울시교육청 (-) 세종시교육청 (▼1등급) 충남도교육청 (-)	경남도교육청 (▼1등급) 경북도교육청 (-) 대구시교육청 (-) 서울시교육청 (-) 인천시교육청 (▲1등급) 전남도교육청 (▲1등급)	경북도교육청 (-) 대전시교육청 (▼2등급) 부산시교육청 (-) 서울시교육청 (▲1등급) 인천시교육청 (-) 제주도교육청 (-)	
4 분야	강원도교육청 (-) 경북도교육청 (▼1등급) 광주시교육청 (▼1등급) 인천시교육청 (▼1등급) 전북도교육청 (-)	강원도교육청 (▼2등급) 경기도교육청 (▼1등급) 광주시교육청 (▼1등급) 대전시교육청 (▲1등급) 세종시교육청 (▼3등급) 전북도교육청 (▼1등급)	광주시교육청 (▲1등급) 전북도교육청 (▲1등급) 충남도교육청 (▼1등급) 충북도교육청 (-)	
5 분야	-	-	강원교육청 (▼1등급)	

8. 공직유관단체 I (공기업) : 32개 기관

※ 기관명 가나다순, 괄호 안은 '22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년 단 기	-	한국수력원자력 (▲1등급)	강원랜드 (▲1등급)	
2 년 단 기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남동발전 (▼1등급) 한국남부발전 (-) 한국마사회 (▲2등급) 한국부동산원 (-) 한국서부발전 (▲2등급)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전력공사 (-) 한국조폐공사 (▲2등급) 한국중부발전 (-)	인천국제공항공사 (▲1등급) 한국남동발전 (-) 한국남부발전 (▲1등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등급) 한국부동산원 (-) 한국서부발전 (▲2등급) 한국전력기술 (-) 한국조폐공사 (▲1등급) 한국중부발전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광해광업공단 (▲3등급) 한국남부발전 (▲1등급) 한국마사회 (-) 한국석유공사 (▲3등급) 한국전력공사 (-) 한국조폐공사 (▲2등급) 한국중부발전 (▲2등급) 해양환경공단 (▲1등급)	
3 년 단 기	강원랜드 (▲1등급) 그랜드코리아레저 (▼1등급) 한국가스기술공사 (-) 한국공항공사 (-) 한국광해광업공단 (▲1등급) 한국동서발전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한국석유공사 (▲1등급) 한국전력기술 (▼1등급) 한국지역난방공사 (▼1등급) 한국철도공사 (▼1등급) 한전KDN (-) 해양환경공단 (-)	= 그랜드코리아레저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가스기술공사 (-) 한국공항공사 (-) 한국광해광업공단 (▼1등급) 한국동서발전 (-) 한국마사회 (▲2등급)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전력공사 (▼1등급)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국철도공사 (-) 한전KDN (-) 한전KPS (▼1등급)	+ 그랜드코리아레저 (▼1등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한국가스기술공사 (-) 한국공항공사 (-) 한국남동발전 (▼1등급) 한국도로공사 (-) 한국동서발전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등급) 한국부동산원 (-) 한국서부발전 (-)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철도공사 (▼1등급) 한전KDN (-)	- 부패 실태 평가 (감점)
4 년 단 기	대한석탄공사 (-) 에스알 ('22 미발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1등급) 한국가스공사 (-) 한국도로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1등급)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전KPS (▼2등급)	대한석탄공사 (▼2등급) 에스알 ('22 미발표) 한국가스공사 (-) 한국도로공사 (▲1등급) 한국석유공사 (▼1등급) 한국토지주택공사 (▼1등급)	대한석탄공사 (▲1등급) 주택도시보증공사 (▼1등급) 한국가스공사 (▼1등급) 한국전력기술 (▼1등급) 한국지역난방공사 (▼2등급)	
5 년 단 기	-	강원랜드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해양환경공단 (▼2등급)	에스알 ('22 미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 (▼1등급) 한전KPS (▼3등급)	

9. 공직유관단체Ⅱ(준정부기관) : 55개 기관

※ 기관명 가나다순, 괄호 안은 '22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년 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등급)	기술보증기금 (▲1등급) 한국무역보험공사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등급) 한국주택금융공사 (▲2등급)	
2 년 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1등급) 국민연금공단 (-) 기술보증기금 (-) 도로교통공단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등급) 신용보증기금 (▼1등급) 예금보험공사 (▲1등급) 축산물품질평가원 (▲1등급) 한국관광공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1등급)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등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등급) 한국석유관리원 (-) 한국장학재단 (▲1등급) 한국전력거래소 (-) 한국주택금융공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1등급) 국민연금공단 (-) 국토안전관리원 (▲1등급) 도로교통공단 (▲1등급) 신용보증기금 (▼1등급) 예금보험공사 (▲1등급) 축산물품질평가원 (-) 한국관광공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1등급)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등급) 한국석유관리원 (-) 한국장학재단 (▲1등급)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등급) 국민연금공단 (▼1등급) 기술보증기금 (▲1등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도로교통공단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등급) 신용보증기금 (-) 한국관광공사 (▲1등급) 한국교통안전공단 (▲1등급)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토정보공사 (▲1등급) 한국농어촌공사 (▲1등급)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등급) 한국전력거래소 (▲1등급)	
3 년 간	공무원연금공단 (▼1등급) 국립공원공단 (-) 국토안전관리원 (-) 근로복지공단 (▼1등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등급) 우체국금융개발원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한국무역보험공사 (▼1등급)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1등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연구재단 (▲1등급) 한국인터넷진흥원 (▼1등급)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등급)	공무원연금공단 (▼1등급) 근로복지공단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등급) 우체국금융개발원 (-) 우체국물류지원단 (-) 한국가스안전공사 (▼1등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등급)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1등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연구재단 (▲1등급) 한국인터넷진흥원 (▼1등급)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전력거래소 (▼1등급)	국가철도공단 (▲2등급) 국립공원공단 (▼1등급) 근로복지공단 (▼2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예금보험공사 (-) 우체국금융개발원 (▲2등급)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1등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등급) 한국산업단지공단 (▼1등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1등급) 한국석유관리원 (▼1등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연구재단 (▼1등급)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1등급) 한국장학재단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등급)	부패 실태 평가 (감점)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4 단계	국가철도공단 (-) 국립생태원 (▼1등급) 우체국물류지원단 (▼1등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등급) 한국고용정보원 (▼1등급) 한국국제협력단 (▼1등급)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한국산업단지공단 (▼1등급) 한국소비자원 (▼1등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등급) 한국에너지공단 (▼2등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등급)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한국환경공단 (▼2등급)	= 국가철도공단 (▼1등급) 국립공원공단 (-) 국립생태원 (▼2등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등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등급)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등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등급) 한국산업단지공단 (▼1등급) 한국에너지공단 (▼1등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등급)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등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등급) 한국환경공단 (▼2등급)	+ 공무원연금공단 (▼2등급) 국립생태원 (▲1등급) 국토안전관리원 (▼1등급) 우체국물류지원단 (▼1등급) 축산물품질평가원 (▲1등급)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고용정보원 (▼1등급)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등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등급)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등급) 한국소비자원 (▼2등급) 한국에너지공단 (▼2등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등급)	- 부패 실태 평가 (감점)
5 단계	-	한국농어촌공사(▼1등급)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한국소비자원 (▼1등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3등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등급) 한국무역보험공사 (▼2등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등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등급)	

10. 공직유관단체Ⅲ(중점) : 45개 기관

※ 기관명 가나다순, 괄호 안은 '22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년 간	한전원자력연료 (▲1등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등급) 한국은행 (▲1등급) 한전원자력연료 (▲2등급)	대한적십자사 (▲1등급)	
2 년 간	국제방송교류재단 (▲2등급) 금융감독원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대한적십자사 (-) 산림조합중앙회 (▲2등급) 중소기업은행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등급) 한국도로공사서비스 (▲1등급)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등급)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1등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한국은행 (-) 한전MCS (-)	국방기술품질원 (▲1등급) 국제방송교류재단 (-) 금융감독원 (▲1등급)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적십자사 (-) 중소기업은행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등급) 한국도로공사서비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한국산업은행 (▲1등급)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한전MCS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등급) 여수광양항만공사 (▲2등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등급) 코레일유통 (▲2등급)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한국도로공사서비스 (▲2등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등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등급)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1등급)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등급) 한전원자력연료 (-)	
3 년 간	국방기술품질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등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등급) 여수광양항만공사 (▲1등급) 인구보건복지협회 (▲1등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등급) 주택관리공단 (-) 중소기업유통센터 (▲1등급) 코레일유통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등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등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등급)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1등급) 한국예탁결제원 (▼1등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등급) 한국특허기술진흥원 (22 미측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등급) 산림조합중앙회 (▲1등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등급) 여수광양항만공사 (▲1등급) 인구보건복지협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등급) 주택관리공단 (-) 코레일유통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1등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등급) 한국체육산업개발 (▲1등급) 한국특허기술진흥원 (22 미측정) 한국환경보전원 (▲2등급)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국방기술품질원 (-) 국제방송교류재단 (▲2등급)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금융감독원 (-) 산림조합중앙회 (▲1등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인구보건복지협회 (▲2등급) 주택관리공단 (-) 중소기업유통센터 (-) 중소기업은행 (▼1등급) 창업진흥원 (▲1등급)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등급) 한국산업은행 (▼1등급) 한국은행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한전MCS (-)	- 부패 실태 평가 (감점)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4 년 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체육회 (-) 창업진흥원 (-) 한국거래소 (▼1등급)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1등급)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한국환경보전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등급) 중소기업유통센터 (-) 창업진흥원 (-) 한국거래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등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등급)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2등급)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1등급)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1등급) 대한체육회 (▼1등급) 한국거래소 (▼1등급) 한국예탁결제원 (▼2등급)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2등급) 한국특허기술진흥원 ('22 미측정) 한국환경보전원 (▲1등급)	부패 실태 평가 (감점)
5 년 간	한국체육산업개발 (▼2등급)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 대한체육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등급)	+ 대한법률구조공단 (-)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체육산업개발 (▼3등급)	

11. 공직유관단체IV(지방공사공단) : 39개 기관

※ 기관명 가나다순, 괄호 안은 '22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년 간	경상북도개발공사 (▲2등급) 부산교통공사 (▲1등급)	경상북도개발공사 (▲4등급)	서울주택도시공사 (▲1등급)	
2 년 간	광주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 대전교통공사 (-) 부산도시공사 (-) 부산환경공단 ('22 미측정) 서울교통공사 (-) 서울시설공단 (-) 울산시설공단 (-) 전남개발공사 (▲1등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창원시설공단 ('22 미측정) 충청남도개발공사 (-)	= 강원개발공사 (▲1등급) 광주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 대전교통공사 (-) 부산교통공사 (▼1등급) 부산환경공단 ('22 미측정) 서울교통공사 (-) 수원도시공사 ('22 미측정) 안산도시공사 (▲2등급) 울산광역시도시공사 (▲2등급) 창원시설공단 ('22 미측정)	+ 경상북도개발공사 (-) 광주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1등급)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1등급) 부산교통공사 (-) 부산도시공사 (-) 서울교통공사 (-) 서울시설공단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1등급) 울산시설공단 (-) 전남개발공사 (▲1등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등급) 충청남도개발공사 (▲1등급)	- 부패 실태 평가 (감점)
3 년 간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 대전도시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 성남도시개발공사 (▲2등급) 세종도시교통공사 (▲1등급) 안산도시공사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1등급) 인천교통공사 (▼1등급) 인천시설공단 (▼1등급) 인천환경공단 ('22 미측정) 전북개발공사 (▼1등급)	강남구도시관리공단 (▲2등급) 대전도시공사 (-) 부산도시공사 (▼1등급) 부산시설공단 (-) 서울시설공단 (▼1등급) 성남도시개발공사 (-) 세종도시교통공사 (▲1등급) 울산시설공단 (▼1등급) 인천교통공사 (▼1등급) 인천시설공단 (-) 인천환경공단 ('22 미측정) 전남개발공사 (-) 전북개발공사 (▼1등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충청남도개발공사 (▼1등급) 화성도시공사 ('22 미측정)	경기주택도시공사 (▼1등급) 경남개발공사 (-) 대구도시개발공사 (-) 대전도시공사 (-) 부산환경공단 ('22 미측정) 성남도시개발공사 (▲2등급) 세종도시교통공사 (▲1등급) 인천교통공사 (▼1등급) 인천시설공단 (▼1등급) 전북개발공사 (-) 창원시설공단 ('22 미측정)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4 등급	강남구도시관리공단 (-) 강원개발공사 (▼1등급) 경기주택도시공사 (▼1등급) 경남개발공사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 남양주도시공사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22 미발표) 대구도시개발공사 (-) 부산시설공단 (▼1등급)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1등급) 수원도시공사 ('22 미측정) 인천도시공사 (▼1등급) 충북개발공사 (-) 화성도시공사 ('22 미측정)	= 경남개발공사 (▲1등급)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등급) 남양주도시공사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1등급)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22 미발표) 서울주택도시공사 (▼1등급)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등급) 남양주도시공사 (▼1등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22 미발표) 대전교통공사 (▼1등급) 부산시설공단 (▼1등급) 안산도시공사 (▼2등급) 울산광역시도시공사 (▲1등급) 인천도시공사 (▼2등급) 인천환경공단 ('22 미측정) 충북개발공사 (▲1등급) 화성도시공사 ('22 미측정)	- 부패 실태 평가 (감점)
5 등급	-	경기주택도시공사 (▼1등급) 대구도시개발공사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2등급) 인천도시공사 (▼1등급) 충북개발공사 (▼1등급)	강남구도시관리공단 (▼2등급) 강원개발공사 (▼1등급) 수원도시공사 ('22 미측정)	

12. 공직유관단체 V(연구원) : 21개 기관

※ 기관명 가나다순, 연구원 유형은 '22년 평가 미 실시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비 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부패 실태 평가 (감점)
2 비 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 비 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4 비 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5 비 판	-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